

# 전력 생산해도 지역소비 안돼... 변전소 등 인프라 확충 절실

##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하려면

#회사원인 정모(45·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최근 솔깃한 제안을 받고 고민중이다. 전남의 한 섬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데, 그 부지 가운데 일부를 분양받은 뒤 발전소에 임대해주고, 15년 후 자신의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을 인도받는 조건을 제안받은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거래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매달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투자제안업체의 주장이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 개정으로 영광에 설치된 변전소의 용량이 21MW(메가와트) 늘었다. 이에 지난 2011년부터 영광에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를 운영중인 전남도는 이곳의 업체들을 위해 증가한 용량 모두를 확보하려 했으나 인근에 풍력발전소를 설립한 민간투자업체 역시 한국전력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절실했던 전남도와 민간업체는 최근 이를 반반씩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도와 업체는 손해를 본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정부의 투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생산되는 전력을 인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변전소를 통해 수도권 등지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전력 낭비가 뒤따르고, 지역발전과는 관계없는 소모적인 시설 설치에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는 태

### 신재생 발전소 2223곳

가동률은 간신히 절반 넘겨

인센티브·수익구조 높이고

지역 공급시스템 필요

양광 2185곳(설비용량 53만1182kW), 풍력 9곳(2만3000kW), 소수력 17곳(1만1351kW), 매립지가스 4곳(6458kW), 조류 3곳(3110kW), 폐기물 3곳(850kW), 바이오가스 2곳(344kW) 등 7개 분야 2223곳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57만3595kW)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동중인 곳은 1254곳(33만6149kW)에 불과해 가동률은 절반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은 원인은 송전선, 변전소 등 전력계통 문제, 발전소 가동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익 구조, 소규모 민간투자업체의 지속적이지 못한 투자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인근에 송전선, 변전소 등이 없는 경우 생산된 전력을 곧바로 쓰지 못하면 그대로 버려질 수밖에 없어 한국전력의 변전소 주변에만 우후죽순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소들이 들어서고 있다.

노후대책 가운데 하나로 일반인에게 각광을 받는데 이어 포스코가 15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470억원을 들여 전남지역 10개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활성화 정상에 조성돼 올 초부터 발전에 들어간 풍력발전단지 전경. 민간사업자가 12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1년부터 660만㎡(200만평) 규모의 면적에 2MW급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했다.

시·군 30곳의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대기업들의 투자도 바라볼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소비하거나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흡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특히 태양광과는 달리 전력생산시간이 불특정한 풍력, 조류 등의 경우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영암 변전소의 경우 최근 늘어난 40MW 용량 모두 풍

력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추가 투자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러다보니 전체 전력 생산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간다고 말만하기보

다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가장 자원이 풍부한 곳에 집중설치하고 전력이 인근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수익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송전선이나 변전소 등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

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민간업체는 “평범한 중소기업이 현재의 여건에서 5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기반시설은 정부, 관리·운영은 한국전력, 행·재정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역할 분담을 통해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 수출효자 ‘쏘울’ 멕시코에 뺏길 수 없다”

### 윤장현 광주시장, 정몽구 회장 면담 성사 여부 주목

윤장현 광주시장이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생산공장 건설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면담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광주공장의 효자상품인 ‘쏘울’이 자리잡고 있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이 오는 2016년부터 소형차를 생산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광주공장의 주력 상품인 ‘쏘울’과 겹칠 경우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시는 물론 지역 경제계에도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3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기아차

가 멕시코 공장에서 이미 소형차를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기아차 쏘울과 K3, 프라이드 중 생산차종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중 광주공장에서 단독으로 생산중인 쏘울이 가장 유력하다.

쏘울은 지난 2009년 미국 현지 첫 판매부터 히트를 친 인기 차종으로, 미국에서만 매년 10만대 이상 판매되는 등 해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모델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신차인 ‘올 뉴 쏘울’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7월 말 현재 13만4000여대가 수출됐다. 같은 기간 광주공장에서는 총 13만6040대의 쏘울이 생산됐으며, 국내

에는 2039대가 팔려 해외수출 비중이 98%가 넘는 정도다. 이에 따라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서도 쏘울이 생산된다면 광주공장의 해외 수출길도 막히게 돼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 시장이 정 회장을 만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기아차측에서는 멕시코 공장 생산 차종은 노사간 각종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쏘울의 현지 생산은 확정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오너의 뜻만 결정되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강행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아차가 올해 수입차에 밀려 최악의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데다 원·달러 환율마저 폭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조의 파업이 강행되고 있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기아차 내부에서는 최근 노조파업 등 각종 경영 악재가 겹치면서 더 이상 국내 공장 증설이나 확충은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멕시코 공장을 포함한 해외공장 신설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아차 경영진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광주공장의 발전과 함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최근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서 “이제는 광주시와 시민 모두가 뚝뚝 뚝치기아차에 대한 애정과 함께 광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호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지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농가부채 상승폭 전국 최고

작년 2657만원 43% 늘어... 전국 평균 100배

지난해 전남지역 농가부채 상승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가부채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가부채는 2012년 가구당 1853만2000원에서 지난해 2657만1000원으로 무려 43.4%(803만9000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농가부채 상승률은 0.4%로 거의 제자리걸음인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큰 폭이다.

최근 6년간 전남도의 농가부채는 2008년 1890만원, 2009년 1993만원, 2010년 2022만원으로 소폭 늘다가 2011년 1672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어 2012년 1800만원대에 다시 올라선 뒤 지난해 2600만원대

로 급증한 것이다. 영농 형태별로는 화훼농가가 1호당 평균 7200만69만원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축산농가 6800만79만원, 과수농가 3000만13만원, 채소농가 2400만65만원, 논벼 1900만19만원 순이다. 벼 농가의 부채는 전년 대비 42.2% 증가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박 의원은 “농가 부채가 심각해드는데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특별한 대책 없이 FTA(자유무역협정)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이자감면이나 정책자금 감리 인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표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관광두레로 착한여행을 떠나세요

올 여름, 우리 가족은 전국 방방곡곡 관광두레 마을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시원한 물놀이와 재미있는 체험을 즐기고 맛있는 향토음식도 먹고 마을 축제도 구경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관광두레 기업과 여행코스들을 우리 모두가 이용하면 할수록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의 활력소가 된대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관광두레 여행! 올 가을에도 전국 방방곡곡으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나보세요"

희망이 싹트는  
**관광두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고 협력하여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관광공동체입니다.